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2. 18.(금) 10:2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2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과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20-70-314)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사업자 162개 방송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한다. 이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한국방송공사, (주)에스비에스 2개사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부가된 재허가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한다. 허가유효기간은 한국방송공사 EBSDTV방송국 등 151개 방송국은 4년으로, 대구문화방송(주) UHD 방송국 등 9개 방송국은 3년으로 하고,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KBS2DTV방송국, SBSDTV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한다”입니다.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사업자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허가 신청 방송국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21개 방송사 162개 방송국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구성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이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총 21개 방송사 중 700점 이상 1개사(1개 방송국), 650점 이상 700점 미만 21개사(159개 방송국), 650점 미만 2개사(2개 방송국)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입니다. 총평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희소자원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이 담당해야 할 공적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방송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방송사 자체

적인 자구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함. 공영방송의 경우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다각화 등 적극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민영방송의 경우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재투자를 위한 내부유보금 확대 등 안정적 방송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방송사는 관련 내규 마련 및 차별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방통위에서도 방송사들의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수어·자막방송 등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주요 재허가 조건입니다. 공통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하여 비정규직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계편성 시 협찬 고지 관련해서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 받은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프로그램제작비 투자비율 관련해서 전체매출액 대비 프로그램제작비 비율을 방통위가 제시한 비율(KBS지역국 3%, 지역MBC 9%, 지역민방 11%) 이상으로 할 것 등입니다. 프로그램제작비 투자비율 관련 재허가 조건 세부내용을 보시면 '21년~'22년(2년간) 한시적으로 지역MBC는 말씀드렸던 매출액 9%, 지역민방은 전체매출액의 11% 이상으로 할 것 등입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제작비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19년 재허가 받은 13개 지역MBC, 8개 민방에 대해서도 지역방송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송사별 주요 조건으로 KBS 관련해서 2DTV 정체성 확보 관련 2DTV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등을 부가하고, SBS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SBS와 SBS 최대액출자자는 자회사 개편계획 등을 포함한 SBS 지배구조 개편계획을 SBS 최대액출자자의 최대액출자자 및 SBS종사자대표와 함께 성실히 협의할 것, 대주주 투자 관련해서 최대액출자자에 제시할 투자계획 주요내용을 SBS 종사자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것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MBC 관련해서 경영 투명성·자율성 관련해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서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시행할 것, 재무적 안정성·수익성 관련해서 지역MBC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조건입니다. 특히 동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조건은 2020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울산MBC를 제외한 전체 재허가 대상 지역MBC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여 관련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영방송 관련해서 경영 투명성·자율성 관련해서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을 이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상파DMB 관련해서 저화질·고화질 채널의 동시송출과 관련하여 수도권 DMB 5개사 중 KBS/MBC/SBS/YTNDMB는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저·고화질 채널의 동시송출을 유지하고, 한국DMB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화질 채널 송출 중단을 허용하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청문 결과입니다. 청문 개요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방송국(KBS제2DTV, SBSDTV)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주)에스비에스에 대한 청문을 12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양사 모두 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의견진술 내용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KBS2TV가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하게 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콘텐츠 경쟁력은 유지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변경된 방송평가 기준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으며, 제작비를 늘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 2TV 재방송 비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향후 2TV 재방비율을 낮추고 독립성을 갖는 채널이 되도록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에스비에스와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외부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며, TY홀딩스 출범으로 인해 소유·경영의 분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으나 SBS에 대한 소유·경영의 분리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가 SBS 미래비전 구현을 위한 긍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문주재자 의견입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KBS2TV는 시사·보도·교양 중심의 1TV와의 편성보완 구조 속에서 드라마, 예능, 오락 등 문화와 여가선용 중심의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방송평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입장이나 드라마,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공영방송사로서 타방송사와의 차별성을 띤 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교양프로그램 제작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청문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번 재허가를 계기로 KBS는 KBS1TV와 2TV 간의 역할분담 개선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2TV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주)에스비에스에 대해서 공공재인 전파자원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지상파방송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적책무,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와의 경쟁관계 등을 내세워 지상파방송사로서 공적책임보다 사업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이번 재허가 심사 기본점수 미달로 나타났고, 이점은 확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방송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점과 광고관련 규정위반과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고 감점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방송사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이와 관련하여 청문기간 중 제출한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추가개선계획은 향후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TY홀딩스 설립으로 SBS의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방송의 공적 기능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주주의 소유와 경영 분리원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SBS 방송분야를 통해 창출된 이윤이 그룹 내 방송분야에 환류되고 방송사업에 지속적으로 재투자되어 SBS 방송이 맡은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TY홀딩스 설립을 위한 방통위 사전승인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금번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사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정책 건의사항으로 재허가 심사평가 시 방송사의 지배구조, 비정규직 인력 관리 현황, 연계 편성 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사례 및 법원 판결사항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정책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재허가 기술심사 관련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21개 방송사업자 160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며,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DTV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한국방송공사 KBS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달라 방송국 간 허가 유효기간이 불일치가 예상되는 EBSDTV방송국과 대구문화방송(주)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자에 따라 EBSDTV방송국은 4년으로, 대구문화방송(주)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은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및 시정노력, KBS2TV의 공공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개선의지 등을 확인한 바, 관련 조건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허가 유효기간은 사업자가 제2DTV방송국과 제1DTV방송국 및 지역제2DTV방송국과의 허가 유효기간 일치를 위해 제2DTV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전에 공표한 유효기간 부여기준 및 타 방송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주)에스비에스 SBSDTV방송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위한 개선 계획 등을 청문과정에서 확인하였고, 청문주재자가 “추가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건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허가 유효기간은 사전에 공표한 유효기간 부여기준 및 타 방송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역방송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제작비 최소 투자비율 조건 완화가 필요하며, '19년에 재허가받은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민방 사업자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민방에 대한 기준 완화를 건의하였으나, 전체적인 지역방송 경영난 심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MBC 등에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항목 배점의 50%에 미달한 지역MBC 7개사의 경우 “2020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으며, 저화질·고화질 채널을 동시송출하고 있는 지상파DMB의 경우 KBS/MBC/SBS/YTNDMB는 저화질 지원 단말기를 보유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동시송출을 유지하고, 한국 DMB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 고지를 실시하고 저화질 채널의 송출 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재허가 세부심사기준 보완 등 정책건의사항은 향후 위원회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2월 내로 재허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내년 2월 재허가 백서를 발간하고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내용입니다. 첫째,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그리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방송국별 재허가 심사 결과,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전파법에 따른 방송국 재허가 기술심사 결과,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과 같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국가 대표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와 MBC가 모두 보도의 공정성에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는 점은 두 방송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MBC의 경우 비록 '일부 시청자들'이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보도의 공정성, 신뢰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유지가 필요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어느 일방의 입장만 다루지 않고 중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검증절차 등을 체계화하고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MBC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방송인 SBS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배구조 개편으로 TY홀딩스 최대주주인 SBS의 지배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유·경영의 분리원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도 지상파방송은 최대주주가 아닌 시청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SBS와 SBS의 최대액출자자는 자회사 개편계획 등을 포함한 SBS 지배구조 개편계획을 SBS 최대액출자자의 최대액출자자 및 SBS 종사자대표와 함께 성실히 협의할 것, 최대액출자자에 제시할 투자계획의 주요내용을 SBS 종사자대표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는데 쉽게 말해 대주주와 노조 간의 미래가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 방통위가 그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 SBS 사용자와 노조가 극한 대립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런 방식이 옳은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SBS 대주주로 하여금 투자계획이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고, 이 계획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등을 방통위가 심사하여 맞다면 승인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노조는 그 과정에서 종업원의 대표로 최대주주의 경영투명성을 감시하고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침은 투자계획을 노조와 상의해서 가지고 오라는 식인데,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방통위가 책임의 일단을 다른 곳으로 미루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조건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4월 말까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발전 계획을 내년 6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으니 그때 가서 방통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투명한 경영계획과 좋은 투자처를 찾아 제시하고 노조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SBS의 미래가치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근래 끊임없이 형평성, 공정성 시비에 오르내리고 있는 TBS교통방송의 공정성 심의에서 별점이 단 1점도 없는 0점이라는 것은 심사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뉴스공장 막말 사태의 심각성과 종편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유지해야 할 법정제재건수 상한선 설치 등을 전제로 한 심사기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는 경영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방송사들의 현실을 여러 모로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KBS, MBC의 편향적이고 불공평한 보도윤리를 지적하는 여론의 눈높이로 보자면 이런 문제가 적절하게 지적되고 또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심사 방식의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방식의 심사나 평가가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지, 국민 여론의 눈높이에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처 직원들 고생하셨고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몇 가지 의견을 첨부하시면서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KBS1과 KBS2에 대한 심사 연도를 달리한 것에 대해 부동의합니다. KBS1은 보도·교양을 중심으로 다루는 매체이고, KBS2는 오락·연예를 주로 담당하는 매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KBS입니다. 그런데 KBS1 점수가 686.37, KBS2가 647.13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송의 심사 기간을 달리한다고 하면 다음 재허가 심사를 어떻게 할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KBS1은 재난방송을 주로 하면서 KBS2가 보완해야 할 방송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4년, 하나는 3년으로 하면 KBS2는 KBS1과 같이 방송편성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즉 구조적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KBS1과 KBS2는 심사기간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입니다. 한 회사가 여러 방송국을 운영할 경우 심사기간을 같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KBS1과 KBS2는 심사기간을 맞추어서 사용자와 그다음에 사업과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은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부분은 원안에 동의하고, 허가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KBS1과 2TV의 기간 차이를 동일하게 맞추자,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신 것입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20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할 때 예외적으로 "한 회사가 소유한 여러 방송국의 심사점수가 서로 달라 방송국 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경우 동일한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2020년 6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재허가 세부계획(안)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KBS1과 KBS2를 동일한 기간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정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그렇다면 맞추는 것뿐만 아니고 기간 문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4년으로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KBS중에서 KBS2만 3년으로 가는 것이 전체 방송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체 KBS를 4년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부위원장님께서 사무처 원안 중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시고 KBS1TV와 KBS2TV의 허가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기준의 의결내용에 비추

어서 동일 기간으로 맞추어야 하고 4년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사무처 원안에 대한 의견과 지금 김 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미디어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지상파의 공적책무에 대한 자각이 훼손될 수 없습니다. 사실 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재허가라는 절차를 밟는 것은 지상파라는 공동체의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상파의 공적책무와 공적 가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 MBC 그리고 TBS서울교통방송은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들은 특정 언론 사기업이 운영하는 종편 등 상업방송과는 차원이 다른 방송사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송사업자들이 이 시비에 휘말린다는 것은 매우 자성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허가를 받는 이 시점에서 이들 방송사업자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허가 조건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 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KBS의 허가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KBS 측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KBS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에서 처분을 내릴 때 이미 공표된 약속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KBS 측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EBS라든지 대구문화방송 등의 기간 조정도 함께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KBS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KBS의 재허가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 고려, 또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제5기 위원회에서 깊이 연구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BS 재허가와 관련해서 조금 전 김효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재무 건전성 등과 관련해 사업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조건을 과연 우리 위원회가 내놓을 만한 또 개입할 만한 내용인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물론 TY홀딩스 출범과 관련해 이런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배경설명이 있지만 과도한 행정개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이번 재허가 과정에서 조건 및 권고사항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또 이를 점검하면 될 내용들이 관례적으로 과도하게 나열된 감이 있습니다. 부관 만능주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음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 현 부위원장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인정하나 타 매체와의 형평성들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하면, 앞서 다른 방송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허가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는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의 요구, 요청을 방통위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2020년 6월 '2020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으로 의결한 안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정했고, 의결했기 때문에 이 의결한 안에 따라서 제안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먼저 많은 방송사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방송평가 시 본 위원회는 최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해당 방송사의 불만이나 비판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방송사에 조건이나 권고를 제시하지만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와 또 방송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방통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각 방송사에 최소한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심사위원회 총평과 일부 심사위원들의 제언 중 공통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고안 첫 번째 사항입니다. 다른 권고사항에 묻혀서 선언적 조항으로 이례적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고 첫 번째 사항은 모든 방송사가 윤리강령을 준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권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조건처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각 방송사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방송사가 개별 윤리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것은 타율적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 제도인 방송윤리강령은 시청자와의 약속이자 방송사 구성원 전부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기 다짐이기도 한데 그 방송윤리강령에는 진실 추구나 공정성, 인권보호, 공적 가치 이런 주요한 핵심 용어를 망라하고 있고 오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정하고 피 보도자의 인권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650점 기준점수 이하를 받은 KBS2DTV와 SBS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BS2DTV방송국의 경우는 향후 공영방송 KBS에 대해 별도의 허가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2020년에 새롭게 개정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KBS 윤리강령의 경우 2004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을 만큼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KBS 윤리위원회는 이것을 제정 하던 2004년도에는 14번에 걸쳐 개최된 이후 2005년 이듬해부터 3회 개최했다고 하지만 아무 내용이 없는 맹탕 위원회를 했고, '11년에 와서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16여년 동안 한 번도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개최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출입처를 중심으로 KBS 취재보도 윤리 문제가 종종 주요 이슈가 됐을 때 윤리강령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윤리강령을 내부적으로 심의징계, 혹은 징계권고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제도개선은 KBS 스스로가 나서서 개선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SBS를 한 번 보십시오. 650점 기준점 이하를 받았는데 앵커 성추행을 비롯해서 출입처 중심 보도 논란의 중심에 선 SBSDTV방송국은 2006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한 뒤에 휴점 내지 폐점된 상태입니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송윤리강령을 이렇게 스스로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현실은 저는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본 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행정기관이 방송사 제작 경영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방송독립을 존중해야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대신에 자율규제시스템인 방송윤리강령과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이 작동되지 않으면 작동 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또한 권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윤리강령을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행정지도해야 합니다. 선진국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이나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을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교육시키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심의징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징계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감독·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송의 자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2020년 세계 주요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가 한국은 올해도 21%로 꼴찌를 했습니다. 작년도 22%로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고,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할 수치입니다. 언론자유도는 선진국 수준인데 언론신뢰도는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언론사의 잘못이고 그 중심에 방송이 있습니다. 물론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율의 존중은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과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의 준수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방송평가에서도 무겁게 다룰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부위원장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 역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전반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비해서는 각 방송사들에 대한 심사 평가점수가 현저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어떻습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난번 심사 당시에 비해서는 지상파방송사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는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는데 유일하게 KBS 허가 유효기간과 관련해서 이견들이 표출되었는데 다수의 의견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김 현 부위원장님 더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이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1의 주요한 역할과 2TV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1과 KBS2를 심사기간을 나누어서 심사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을 쪼개서 앞뒷면을 분리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나머지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묻는다고 한다면 2020년 6월에 의결한 방통위의 의결사항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3년, 4년으로 분리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KBS의 권능,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1TV의 편성과 오락, 연예 등 다양한 형태의 보완장치로서 2TV의 기능을 서로 상호 보완적·보조적 역할로 보고, KBS를 한 덩어리로 봐야지 KBS1과 KBS2를 분리해서 심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점수 배점에 있어서 중요 사안에 대해 배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입니다. 그래서 KBS1이 차지하는 비중과 KBS2가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놓고 심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인 KBS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점수가 2.87점 미달했다고 KBS2는 3년으로 하고, 한 해 이어서 KBS1을 심사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사업자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KBS가 요청을 했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불 때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별도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십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어차피 소수의견이니까 표결해 봐야 안 되는 것을...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지상파방송사는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다른 방송사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이번 심사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한 후 재허가와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의견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재허가 심사제도와 효과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다른 방송사와 동일하게 재허가 심사를 받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각계의 논의들을 모아서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 전반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작업들을 5기 방통위가 진행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허가 유효기간과 공영·민영, 국가기간방송 이런 매체 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적인 심사기준과 유효기간 적용 부분들과 방송평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3년, 4년 주기로 진행되지만 방송평가 제도는 매년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다시 한 번 과연 현실에 맞는 심사제도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가된 조건 등에 대한 방송사의 성실한 이행과 면밀한 점검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방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지역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 변경에 관한 건 (2020-70-31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지역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사업자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 변경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9년도 재허가를 받은 지역민방 8개사 및 지역MBC 13개사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입니다. 다음 재허가 조건 변경(안)입니다. 지역MBC(13개사), 지역민방(7개사)에 대해 기존 재허가 조건,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비율 이상(지역민방 14%, 지역MBC 10%)으로 할 것에 대해서 2021년~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민방은 전체매출액의 11%, 지역MBC는 전체매출액의 9% 이상으로 할 것 내용을 추가하고, 지역민방(OBS)에 대해 기존 조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는 ‘19년 재허가 시 제출한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 수준 이상으로 할 것 등 내용에 대해 ‘21년~’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의 80% 이상을 투자할 것 내용을 추가하는 변경(안)입니다. 세부

적용 대상 방송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재허가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9년도 재허가 심사를 받은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경과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 지상파방송 경영환경 변화입니다.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은 지역MBC는 2010년 3,151억원에서 2019년 1,173억원으로 62.8% 감소하였고, 지역민방은 2010년 1,787억원에서 2019년 1,091억원으로 3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도 3분기 대비 방송광고매출은 지역MBC 13.9%, 지역민방은 20.8% 감소하였습니다.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완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민방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광고매출 감소 및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행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 재허가 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10년간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송광고매출 감소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지역방송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민방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을 전체매출의 14%에서 11%로 조정하는 재허가 조건안을 제시하였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지역민방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준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비율 완화에 대한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되 지역민방 이외에 방송광고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가 상당한 지역MBC에 대해서도 제작비 투자비율을 조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경영상황에 놓여있는 타 지역방송사, 즉 '19년도에 재허가를 받은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정액방식으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을 부가받은 OBS경인TV(주)에 대해서는 타 지역민방의 제작비 완화비율 수준을 고려하여 '연도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의 8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2월 중으로 대상 방송사에 재허가조건 변경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지역방송사업자 프로그램제작비 투자 조건 변경 대상 방송사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올해 처음으로 IPTV 총매출이 지상파방송의 총매출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통증 완화 주사를 놓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행정청이 이런 조치들을 취해 주는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지금 위축된 시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시적인 통증 완화 주사를 가지고도 결국은 나중에 또 다시 수익구조가 악화되어서 또 다른 통증 완화 주사를 놓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하여튼 지상파

방송사 경영진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원안 동의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코로나19 사태가 빚은 비상상황이라고 봅니다. 방송광고 감소 직격탄을 맞은 지역방송, 지역민방이 아마 고충을 토로하고 그것을 수렴해서 고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사의 근본적인 자구책을 어떤 형태로든 마련하도록 독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결된 지상파 재허가와 연계되어서 이미 완료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건들을 완화해 주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당장 통증을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사별 경영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자구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또한 이런 지역방송사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2020-70-316)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다>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한다’입니다. 아래 <표> 조건(안)입니다.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일 이후에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및 계열회사,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임명 전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추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역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과기정통부 조건에서 '방송구역별'로라는 표현만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원 구성 시 ... 사내추천 이외 외부단체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권고사항(안)입니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방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최대액출자자인 (주)케이티스와의 인터넷 재판매 관련거래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케이티셋과의 위성중계기 임차 관련 거래 시 부당하게 높은 거래 대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직접사용채널 운용 시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PP 채널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가구 지원 확대계획 (2021년 11월 과기정통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용 방송패키지'에 다양한 채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등에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월 재허가 신청을 했고, 과기정통부는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기간 중 스카이라이프 및 최대주주 KT 대표 등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개요입니다. 심사위원장은 안형환 상임위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분야별 외부전문가 6인으로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방통위에서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사항 및 배점기준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총평은 스카이라이프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및 가입자 감소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결합서비스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자생을 위한 지속적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시청 가구에 대한 지원 및 통일을 대비한 위성방송 서비스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무 수행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조건 등을 부가하여 재허가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는 1,000점 만점 중 762.6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조건(안) 부가취지입니다. 경영투명성 관련해서는 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주요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재직할 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자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운영규칙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고, 사내추천 외 외부단체 추천으로도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구성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권고사항 부가취지입니다. 사외이사 관련해서는 현재 5인의 사외이사 중 방송전문성을 가진 이사가 1인에 불과해서 방송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확대를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관련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직접사용채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영화와 성인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외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채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난시청지원 관련해서는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등 구체적 이행을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과 권고사항은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조건(안) 중 '방송구역별로'라는 표현 부분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것을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조건(안) 중 사외이사를 스카이라이프의 계열회사에 2년 이내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는 조건은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법령은 다음 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안형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으로 이번 심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002년도에 개국한 이래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심사는 올 연말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공적책임 그리고 시청자 권익보호 등의 이행실적을 엄격히 점검하고, 향후 충실한 공적 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뿐 아니라 최대주주인 (주)케이티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3일간 진행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 현황, 재무구조,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내용 등 그리고 기술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한 위성방송의 역할 연구 등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위성 방송사업자로서 어떠한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사무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위원회를 내실화할 수 있는 조건과 난시청 해소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과 권고 사항은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충실히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로 생각됩니다. 이번 재허가 과정을 통해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국내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방송 미디어산업을 넘어서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권 방송기반총괄과장

-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방송제작 과정에서 폭력적인 장면과 성희롱 장면 등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19년 국정감사에서 장시간 촬영 등 아동·청소년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19년 10월, 그리고 올해 2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하고 올해 6월부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 드라마협회, 한국연기자노동조합 등 관련 협회와 관계부처 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노동부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작을 위한 사전조치로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의도 등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작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행위와 과도한 노출행위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전과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하여야 하며, 출연자에 대한 정보 노출로 인해서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입장은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는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이드라인이 재허가나 재승인, 방송평가 등 다른 규제와 결부되어서 사실상 제재효과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은 가이드라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사업자, 관련협회·관련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발송하고 한 달 뒤인 내년 1월 18일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붙임 1>은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고, <붙임 2>는 현장에서 제작진들이 쉽게 가이드라인을 알 수 있도록 1장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뒤늦은 감이 생각될 정도로 사실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고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안을 잘 마련해야 하는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방송제작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극빈아동이라면 그대로 또 아니고, 그것이 대역을 써서 연기한 것이라면 그것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방영되는 아동·청소년의 무차별적인 노출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무처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공감하는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기반총괄과장

- 저희들이 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내년에는 방송평가에 방송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일단 방송사의 자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외주제작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제작사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제작사들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뽑아서 아주 강한 교육을 시키는 아이돌 스타 양성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 적용된다면 아이돌스타를 양성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권익,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당 제작사라든지 회사들에 대한 설득, 설명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합니다. 앞서 김창룡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선언적 의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 국감 때 EBS <보니 하니> 문제에서 시작한 것인데 물론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필수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너무 지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안이 생기고 해결하는 방식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절차들은 최대한 줄여서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 현 부위원장**

- 다른 논의는 아니고, 채널A 관련해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A에 대한 방통위가 해야 할 숙제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추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7분 폐회 】